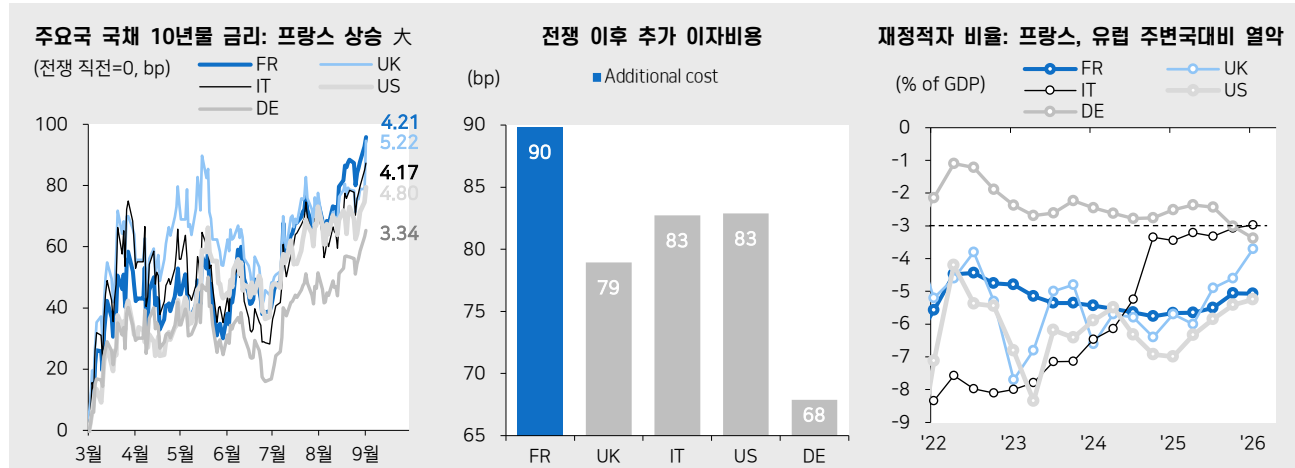


오늘의 차트

박민서 연구원

프랑스로 알아보는 재정 불안의 미래



주: 첫번째 그래프의 값 표시는 9월 1일 종가 기준 각 국가별 10년물 금리 레벨

자료: Bloomberg, FT, CEIC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최근 글로벌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프랑스 금리 상승이 두드러진다.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9월 1일 기준 4.21%로 유럽 재정 우려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4.17%를 앞지르고 있으며, 전쟁 직전(2월 26일 기준) 대비 상승폭도 +95.8bp로 G7 국가 중 가장 컸다. 물론 2분기까지는 영국의 금리 상승폭이 더 가팔랐으며, 현재까지 상승폭도 +94.57bp로 프랑스와 유사하다.

다만 발행 규모까지 고려하면 프랑스의 조달비용 부담은 더욱 명확하다. 전쟁 이후 프랑스의 신규 발행 국채 조달금리가 전쟁 직전 금리가 유지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보다 약 90bp 상승했다.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100bp 상승 수준이 유지될 경우 신규 발행에 따른 추가 이자비용은 9년 후 약 335억 유로(올해 이자비용 예산 648억 유로)까지 확대된다고 추정한 바 있다. 즉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의 상대적 약세는 향후 누적될 재정부담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반영된 결과다.

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FY27 예산 초안에 따르면 이자비용(648억 유로→742억 유로)과 사회보장지출(8366억 유로→8383억 유로) 등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지출이 증가하며 재정적자 목표 달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었다. EU 기준에 따라 29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%로 낮추려면 27년에 4.3%까지는 도달해야 하나, 현실적으로 4.9%가 전망되고 있다. 더 큰 문제는 프랑스 의회는 과반 정당 없이 파편화된 상태이며, '27.4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긴축에 협조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.

프랑스 금리 상승은 재정 악화는 물론이고 이를 개선할 정치적 의지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때 장기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. 즉 미국도 프랑스와 구조가 다른 측면은 있으나, 전쟁+재정+정치라는 부담 요인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.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